

다시 예금으로…은행권 4%대 금리 부활에 자금 유입

주식시장 투자자 관망세에 거래대금 급감

정기예금 5개월 연속 증가…적금도 늘어

지방은행도 속속 인상…5% 돌파 기대감

은행권에 연 4%대 정기예금이 등장하면서 예·적금으로 눈을 돌리는 금융소비자가 늘고 있다. 주식시장에서는 투자자에 탐입이 증가했지만 거래대금은 줄어드는 등 관망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은행권 정기예금과 적금 잔액은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적금에서는 최고 연 9% 안팎의 상품까지 등장하면서 목돈을 한꺼번에 맡기기보다 매달 일정 금액을 모으려는 수요도 커지고 있다. 금리가 더 오를 경우 2022년처럼 연 5%대 정기예금이 다시 등장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10월 첫째 주 기준 은행권 12개월 만기 정기예금 가운데 최고 우대금리는 연 4.05%까지 올라왔다. SC제일은행은 ‘e-그린세이브예금’에 기본금리 3.85%에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연 4.05%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광주은행 ‘굿스타트예금’ 3.98%를 비롯해 제주은행 3.99%, 전북은행 3.93%, BNK부산은행 3.92% 등 지방은행도 4%에 가까운 금리를 내놓고 있다.

시장 연동 금리를 제공하는 광주은행 ‘굿스타트예금’의 경우 지난달 28일 4%를 돌파한 데 이어 30일 신규가입에는 최고금리 4.08%를 적용했다. 기본금리에 첫 예금거래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등 우대조건을 충족하면 최고금리를 받을 수 있다.

은행에 들어오는 돈도 늘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9월 말 정기예금 잔액은 1006조3871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8552억원 증가했다. 지난 5월부터 5개월 연속 증가세다.

적금도 마찬가지다. 5대 은행의 9월 말 정기적금 잔액은 46조2749억원으로 한 달 새 1조1992억원 늘었다. 목돈을 맡기는 정기예금뿐 아니라 매달 돈을 넣는 적금으로도 자금이 들어오는 모습이다.

최근에는 적금 금리가 정기예금보다 높

게 제시되는 상품도 잇따르고 있다. 전북은행의 ‘JB 슈퍼세드 적금’은 기본금리 연 3.5%에 이벤트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연 13.5%를 제공하고, KB국민은행 ‘KB카드 쓰담적금’은 최고 연 12%, i뱅크 ‘더큐 폰적금’은 최고 연 11%를 제시한 바 있다. 다만 두 자릿수 금리는 특정 조건이나 이벤트를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 최고금리다.

이달 들어서도 높은 금리를 내건 적금 상품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5일 ‘우리금융 다함께 적금2’를 출시했다. 12개월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기본금리는 연 3.5%지만 계열사 거래와 신규 고객, 거래 실적 등에 따른 우대금리를 모두 적용하면 최고 연 9.0%까지 받을 수 있다. 월 납입 한도는 30만원으로, 1년 동안 최대 360만원까지 넣을 수 있다.

주식시장에서는 투자 대기자금이 늘었지만 거래는 오히려 줄었다. 지난달 29일 기준 투자자예탁금은 107조7257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8조원 넘게 증가했다. 하지만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은 6월 50조 3470억원에서 9월 20조9680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주식시장에 돈은 남아 있지만 적극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상황을 지켜보는 투자자가 많아졌다는 의미다. 올해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뒤 금등락을 반복하면서 투자자들의 부담도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예금금리가 다시 오르고 적금 상품의 금리 경쟁까지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의 선택지도 달라지고 있다. 주식처럼 수익률이 크게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예금에서는 연 4% 안팎, 적금에서는 조건에 따라 두 자릿수 금리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에서 예·적금의 매력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금리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5%대 예금이 다시 등장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2022년 기준금리가 빠르게 오르던 당시 은행권에서는 연 5%를 넘는 정기예금 상품이 잇따라 출시됐다.

다만 예금금리 상승이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변수다. 은행들이 예금을 유치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지고, 대출금리에도 상승 압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에는 주식 등 위험자산보다 확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예·적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분위기”라며 “시장금리 움직임에 따라 은행들의 수신 경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내년 4월부터 은행 9시 30분 문 연다

금융노사 단협 체결…영업시간 30분 단축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6일 내년도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사용자협의회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금융노사는 내년 4월부터 은행 점포 영업 개시 시간을 오전 9시에서 9시 30분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디지털 금융 확산 등 금융환경과 고객 이용행태 변화를 반영하고, 영업 전 충분한 업무 준비를 통해 고객 서비스와 금융 소비자 보호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금융노사는 또 내년도 임금 인상률을 총액 임금의 3.0%로 합의했다. 아울러 고용 확대와 사회 공헌 등 금융

산업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총액 임금의 0.75% 상당 금액을 재원으로 기관별 상황에 따라 약 1만명 규모로 청년 인턴 채용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총액 임금의 0.25% 상당액은 금융산업 공익재단에 출연해 일자리 확대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금융노사는 이 밖에 직원이 주 1시간 범위에서 근무시작 시간 이후 30분 이내에 출근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 출근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금요일 1시간 조기 퇴근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해당 시간을 적립해 보상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연합뉴스



로봇의 세계 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6 스마트라이프워크에서 방문객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3분의 1 정부가 보장

특별법 시행령 내달 13일 시행…경매 배당 등 차액 지원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를 거쳐도 보증금의 3분의 1을 돌려받지 못하면 정부가 부족분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13일 시행된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3분의 1 회복을 보장하는 최소보장제와 신탁사기 등 무관계약자를 위한 선지급·후정산 제도의 구체적인 지원금 산정 기준과 지급 절차를 담았다.

최소지원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최소보장금에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받은 금액,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 경매차익과 임대료 지원액 등을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5000만원인 피해자가 경매 배당으로 2000만원, 경매차익으로 1000만원을 회수했다면 최소보장금 5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뺀 2000만원을 최소지원금으로 받게 된다.

선지급금은 경·공매 등이 끝나기 전에 지급한다.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 지급·정산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는다.

LH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한 차례에 한해 30일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지급 결정이나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을 받은 뒤 보증금을 추가로 회수하는 등 반납 사유가 생기면 해당 금액을 반납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 반납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피해주택 매입 절차도 손봤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경·공매로 피해주택을 매입하면서 그 주택에 사는 피해자가 아닌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를 떠안은 경우 그 비용을 주택 취득 비용에 넣을 수 있게 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금감원 “금융권 해킹 공격 주소 28개 전파”

19개 IP…금융사들 자체 점검

금융당국이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활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금융권 해킹 공격과 관련해 인터넷주소(IP) 28개를 특정했다.

금감감독원은 6일 공지를 통해 “최근 금융권에서 발생한 침해사고 관련 해킹을 시도한 IP 주소 33개, 중복을 제거하면 28개를 일부 국가 정보와 함께 전파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디지털리스크분석팀은 전 날에는 오후 6시 기준 금융권 해킹 사고 관련 공격자 IP 19개를 특정해 금융권에

전파했다. 금감원은 해킹시도 UP 주소, 보안 취약점 정보 등 중요 위협정보를 파악하는 대로 금융권에 공유하고 있다.

전날 기준 IP 소재 지역은 12개국에 달했다. 미국, 일본, 홍콩(중국),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스페인, 일본, 라트비아, 스웨덴, 독일 등이었다. 미국발 IP가 5개로 가장 많았고, 일본과 스웨덴, 독일은 각 2개씩 중복이 있었다. 국내 IP도 1개 있었다.

금감원은 공격자 IP 목록을 전 금융권에 배포해 오는 8일까지 자체 점검과 미흡 사항 조치를 마쳐달라고 요청했다.

금융회사들은 기간과 범위를 넓혀 자체 점검을 지속 중이다. 연합뉴스

내년 2인 가구 첫 30% 돌파…고령부부 ‘노노 케어’ 비상

국가데이터처 ‘장래가구추계’

1·2인 가구 전체 67.7%…소규모 가구 증가세

2인 가구 44.3% 고령 가구…돌봄 공백 등 우려

내년 2인 가구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3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1인 가구와 2인 가구를 합친 비중은 전체 가구의 67.7%에 달하는 반면, 전통적인 가족 형태로 꼽히던 3·4인 가구는 갈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인 가구의 44.3%는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고령 가구로 추산되면서, 고령 부부가 서로를 돌보는 이른바 ‘노노

케어’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가데이터처의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2027년 전체 가구는 2280만7000가구로 올해보다 0.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가구 수는 오히려 늘어나는 셈이다. 가구 증가를 이끄는 것은 1인·2인 가구다. 내년 1인 가구는 855만3000가구로 올해보

다 2.3% 증가하고, 2인 가구는 689만가구로 2.1%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3인 가구는 412만1000가구로 0.4% 감소하고, 4인 가구는 260만9000가구로 2.9% 줄어든 전망이다. 5인 이상 가구도 63만4000가구에 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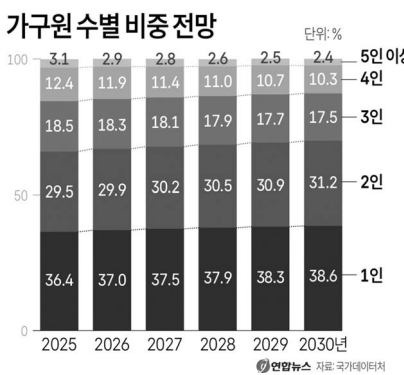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변화는 더욱 뚜렷하다. 1인 가구 비중은 올해보다 0.5%p 상승한 37.5%로 가장 높고, 2인 가구는 올해 29.9%에서 내년 30.2%로 0.3%p 높아진다.

장래가구추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2인 가구 비중이 30%를 넘어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내년에는 2인 가구 비중이 3인 가구와 4인 가구를 합친 비중도 처음으로 앞지른다. 3

인 가구 비중은 18.1%, 4인 가구는 11.4%로 합하면 29.5%다. 가구 수로 비교해도 3·4인 가구의 합계는 673만가구로 2인 가구보다 16만가구 적다. 혼자 살거나 둘이 사는 가구가 전체의 3분의 2를 넘어서는 것이다.

이 같은 소규모 가구 중심의 변화는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3·4인 가구는 감소하고 1·2인 가구는 증가하는 흐름이 2043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추산됐다.

2043년에는 1인 가구 비중이 40.9%까지 높아지고 2인 가구도 34.2%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3인 가구는 15.6%, 4인 가구는 7.7%까지 낮아진다.



인구 감소가 본격화하면서 전체 가구 수는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지만, 가구 구조에서 소규모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커진다. 추계 마지막 해인 2052년에는 1인 가구가 전체의 41.3%, 2인 가구가 35.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3인 가구는 15.2%, 4인 가구는 6.7%까지 줄어든다.

문제는 2인 가구 증가가 고령화와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내년 2인 가구 가운데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비율은 44.3%로 해보다 1.3%p 상승한다. 2인 가구 10곳 가운데 4곳 이상이 고령 가구인 셈이다.

상당수는 자녀와 떨어져 부부만 생활하는 고령자 가구로 추정된다. 핵가족화가 일반화된 데다 의료서비스 발달로 고령자의 건강 상태가 개선되면서 부부가 함께 노년을 보내는 경우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부부 모두 고령자인 만큼 한쪽의 건강이 악화되면 다른 한쪽이 돌봄을 맡아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상대적으로 건강한 노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배우자를 돌보는 ‘노노 케어’가 새로운 돌봄 문제로 부상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가족과 함께 거주하더라도 실제 돌봄을 담당하는 배우자 역시 고령자라는 점에서 기존의 독거노인 중심 복지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